

## 시민군 만들기: 실패한 기획인가, 미완의 기획인가\*

공진성 (조선대학교 부교수)

### 논문요약

이 논문은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 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이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쇠퇴했고, 21세기의 촛불집회 속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 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주제어: 시민군, 공화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 병역

---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서론

누가 군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군인에 적합한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군인이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다른 하나의 대답은 모든 시민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제네바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이렇게 말했다.

공공 업무가 더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게 되어서 [시민들이] 자기 몸으로보다는 돈으로 봉사하기를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이미 멸망에 다가와 있다. 전투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용병을 사고 자신들은 자기 집에 남아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총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대표를 임명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집에 남아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나태로 인해 또는 돈의 힘을 이용해 그들은 마침내 용병을 삼으로써 조국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대표자를 뒤편으로써 조국을 팔아먹는다.<sup>1)</sup>

루소에게 군인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공공 업무였고, 그러므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시민이 직접 해야 할 일이었다.

한 세기 앞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Benedictus de Spinoza) 역시 시민군의 이상을 옹호했다. 그의 생각에 군대는 “어떤 예외도 없이 오직 시민들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무기를 보유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 시민의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sup>2)</sup>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시민의 군

1)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중현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펍킨클래식, 2010, pp. 133-134.

2)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지음, 공진성 옮김, 『정치론』, 서울: 길, 2020, p. 155. 물론 이것은 최선의 군주정에 해당하는 원칙이고, 귀족정에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공화주의적 정신은 어느 정부

사적 덕성을 강조했다.

신민이 공포에 질려 무기를 잡지 않는 정치공동체는 평화를 누린다고 보다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강인함에서 생겨나는 덕이며, 복종은 정치공동체가 내리는 공동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실행하려는 지속적인 의지이기 때문이다. [...] 평화가 신민의 무기력함에서 기인하고 신민을 그렇게 굴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마치 양떼처럼 인도하는 정치공동체는 정치공동체라기보다 더 올바르게 황야(荒野)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sup>3)</sup>

시민과 군인을 이렇게 일치시키려는 기획 속에서 시민은 결코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은 스스로 군인이 되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자유인임을 증명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과연 현실 속의 시민과 군인도 그런 존재였을까? 저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시민과 군인의 모습은 결코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이상’인지도 모른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이런 ‘시민=군인’의 이상을 또한 공화주의적 이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서구에서만, 그리고 전근대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이상이 아니라,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조선인/한국인의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상이다.

이 글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시민군의 이상이 어떻게 등장하고, 쇠퇴하고, 부활하고, 진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연결해 묘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화주의적 시민군 이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유주의와 평화주의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형태에서나 동일하다.

3) 스피노자, 위의 책, p. 137.

## II. 공화주의적 시민군 이상과 자유주의적·평화주의적 비판

오늘날 우리가 병역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해 생각할 때, 병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공화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화주의는 새로운 시각 같지만, 사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발견되는 병역을 바라보는 매우 오래된 시각이다.<sup>4)</sup> 병역을 기능적 분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도 비교적 새로운 시각 같지만, 플라톤의 이상 국가 속에 국가의 군사적 방어를 전담하는 ‘수호자 계급’이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매우 오래된 시각이다.<sup>5)</sup> 그러나 병역을 바라보는 가장 오래된 시각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적어도 규범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시각은 공화주의적 시각이다. 강제 징집과 부유층의 은밀한 병역 기피 현실이 공화주의 이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개병제를 옹호하는 논리나 병역 기피를 비판하는 논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화주의적이다. 그 핵심은 병역 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통해 드러나는 (또는 비록 어느 정도 강제적일지라도 그 이행을 통해 함양되는) 시민의 덕성에 대한 강조이다. 병역과 관련한 우리의 현실은 이 세 가지 경쟁하는 시각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모호하게 섞인 시각을 가지고 병역과 관련한 현실을 바라본다.

### 1. 공화주의적 시민군 이상

“누가 군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공화주의자는 “모든 시민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에서 방점은 ‘모든’보다 ‘시민’에 찍힌다. 시민과 국민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외국인이 아닌 경우) 나이를 먹

4) 초기 기독교는 살인이나 살상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적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주의적 전통은 4세기 이후 ‘정당한 전쟁(bellum justum)’ 이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는 이상규,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 『역사신학논총』 제11권, 2006, pp. 8-28 참조.

5)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 『국가·정체』, 서울: 서광사, 1997, p. 158 (374b) 이하 참조.

기만 하면 저절로 시민이 되는 곳에서 ‘시민’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정치적 의미의 ‘시민’은 자연적 의미의 ‘인간’이나 법적 의미의 ‘국민’과 구별되며, 시민이 되는 과정에서 ‘군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인이 되는 것은 시민의 덕성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일이고, 또 군인이 됨으로써 시민의 덕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군사적 활동은 대개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국가 자체가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군사적 영광도 그들 차지였다. 주인의 군사적 활동을 돕기 위해 어차피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종과 노예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주인과 그 영광을 나눌 수 없었다. 군사적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 어디까지나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유인들의 것이었다. 자유는 군사적 활동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를 드는 것은 자유의 표현이자 그 자유를 지킬 능력, 곧 덕의 표현이었다.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전쟁 또는 군사적 활동을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전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속이냐 자유이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팽창이 필연적이라고 까지 생각했다.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은 대립과 갈등을 낳고 결국 전쟁을 불러오는데, 이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전쟁에서 이기고 스스로 팽창해야” 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 필연적 팽창이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군대가 강할까?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인 마키아벨리

6) 김정희,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2009, p. 63.

(Niccolò Machiavelli)는 이 문제와 관련한 공화주의적 시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군주론』 12장과 13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대의 종류에 대해 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한 군대는 “자신의 군대” 또는 “자신의 무력”이다.<sup>7)</sup> 그것은 다시 말해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이다.<sup>8)</sup> 그것은 당연히 ‘남의 무력’, 곧 용병이나 원군(援軍)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또한 상비군에 반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상비군, 즉 직업군인과 용병을 비판해왔는데, 그것은 자기의 신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전제적 지배자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상비군을 두는 지배자는 그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자를 수탈하게 마련이고, 상비군을 활용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 다시 피지배자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자기의 신민을 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두려워하여 다시 상비군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불신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역설적으로 먼저 피지배자를 무장시켜 불신의 악순환을 끊으라고 조언한다.

신생 군주들은 신민들의 무장을 결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민들이 무장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들은 항상 신민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무장시킬 때, 그들의 무기는 실상 당신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신하던 자들은 충성스럽게 되고, 원래 충성스러운 자들은 그대로 충성을 지키며, 신민들은 열성적인 지지자로 변모합니다.<sup>9)</sup>

상비군을 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배자가 용병을 고용하는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돈을

7)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15, p. 98.

8) 마키아벨리, 위의 책, pp. 98-99.

9) 마키아벨리, 위의 책, p. 139.

받고 싸우는 용병에게서 충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화주의적 비판의 핵심이다.<sup>10)</sup> 그러므로 피지배자를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어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화국과 상비군은 모순 관계에 있다. 일부가 직업 군인이 되고 나머지는 생산에만 종사한다면 무기를 든 일부에 의해 나머지가 지배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된 후에 주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생산과 군복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병존시키는 것이다.<sup>11)</sup>

시민이 일정 기간 군인이 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의무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 지키고자 하는 국가가 남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res publica; commonwealth)’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또한 그 의무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병역관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평등이 깨지면 공화주의적 애국심도 깨진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타인의 지배에 대한 도착적 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남의 군복무를 통해 자기를 지키는 특권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봉사한다는 착각 속에서 사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키도록 강제되는 노예나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가 원군(援軍)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군주나 공화국이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는 “현존하는 군주나 오늘날의 공화국이 방어와 공격을 위해 자국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크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군대의

10) 마키아벨리, 위의 책, p. 84 참조.

11) 이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 모든 시민이 교대로 다스리고 다스림 받았던 것과 유사하다.

12) 마키아벨리, 위의 책, p. 353.

부재 자체가 아니라 그런 군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 즉 “자국의 백성을 군인답게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 2. 시민군 이상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병역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공화주의적 시각을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은 낡은 것으로, 반대로 자유주의적 시각을 그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공화주의적 시각이 군사적인 것에 담긴 어떤 불변적 속성에 주목한다면, 자유주의적 시각은 군사적인 것을 가변적인 맥락 속에서 관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시각은 병역이나 군대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수단적 의미만을 부여한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반복되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부의 축적은 물론 장수조차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정치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증대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병역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이라는 변화와, 그 변화가 부분적으로 강제하는 개인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 인식에 의해 생겨났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병역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스미스는 전쟁 수행 방식이 생산 방식과 관련됨을 밝히면서 생산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전쟁 수행 방식, 즉 군대의 조직 방식도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스미스는 전쟁이 누구의 비용으로 치러지는지를 살펴본다. 스미스에 의하면,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상비군의 효율성이 부정되고 공화주의

13) 마키아벨리, 위의 책, p. 150.



적 시민군의 이상이 유지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부양하는 것이 그 사회의 낮은 생산력 탓에 어려웠기 때문이다.<sup>14)</sup>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은 자기 비용으로 상이하게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전쟁에 아예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 규모가 커져서 대규모 보병이 필요해지면서, 그리고 마침내 해전에서 배의 노를 저을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몸밖에 가진 것이 없는 빈민조차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민주정이 등장하게 되었다.<sup>15)</sup>

중세에도 바로 이 원칙, 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었지만, 그때에는 전쟁이 시간적·공간적·인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토지를 가진, 그러나 노동하지 않는 왕과 영주, 그 가신들의 일이었다.<sup>16)</sup> 이런 사회상태에 변화가 생겼고, 스미스에 의하면 그것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전쟁 기술과 생산 기술이 모두 발전하여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자기 무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만이 (조세 수취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미스의 생각에 군대의 규모와 그 인적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사회가 지닌 경제적 생산 능력과 군사적 기술의 수준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문명사회에서 군인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 부양되므로, 군인의 수는 후자가 그들 자신과 그들이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부·사법부 관리들을 각각의 지위에 적합한 방식으로 부양하고 난

14) 에덤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국부론』, 서울: 비봉출판사, 2007, p. 857.

15) 서병훈,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 비판적 성찰.” 『서양 고대·중세 정치사상사』, 서울: 책세상, 2011, pp. 41 이하 참조.

16) 볼프 슈나이더 지음, 박종대 옮김, 『군인』, 파주: 열린책들, 2015, pp. 87-89 참조.

다음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넘지 못한다. [...] 오늘날 유럽의 문명국들에서는 주민의 1/100 이상이 군인이자면 즉시 파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sup>17)</sup>

스미스는 한 사회가 가진 부양 능력이 군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필요한 수에 맞춰 강제로 부양하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sup>18)</sup> 스미스는 또한 전쟁기술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상비군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전쟁기술은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고도의 것이므로 [...] 전쟁기술을 이런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 시민계급의 유일한 또는 주된 직업이 되어야” 한다.<sup>19)</sup> 직업 군인의 필요성을 스미스는 또한 분업의 합리성을 들어 옹호하는데, 다른 어떤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업이 전쟁기술의 진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영역에 분업을 도입하는 일은 다른 일반 생산 활동의 경우처럼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분업이 다른 기술에 도입된 것은 하나의 특정한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것저것 손대는 경우보다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직업을 다른 모든 직업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특정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지혜뿐이다. [...] 많은 국가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상황에 서조차 반드시 이런 지혜를 가지지는 못했다.<sup>20)</sup>

17) 스미스, 『국부론』, p. 859.

18) 그러나 국가간의 경쟁은 이른바 적정 수준의 군사력만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스미스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93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징집이 실시되었고, 1800년경 2700만 명이라는 유럽 최대 인구를 가진 프랑스는 12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았다(슈나이더, 『군인』, p. 124). 여성과 아동을 제외하면 거의 성인 남성의 1/10이 군인이었던 셈이다. 프랑스의 이런 대규모 징집은 이웃 국가들도 똑같이 군사력을 키우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고, 결국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

19) 스미스, 『국부론』, p. 860.

20) 스미스, 위의 책, pp. 860-861.

스미스는 ‘국가의 지혜(the wisdom of the state)’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적 분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부(富)가 침략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가 군사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목사회나 농경사회에서는 생산을 위한 활동에 군사적 훈련의 성격이 숨어 있어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따로 구분하여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이 (잠재적) 전투원이 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생산 활동에 군사적 훈련의 성격도 없고, 또 사시사철 생산에 종사할 수 있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고는 군사적 훈련을 따로 받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모든 시민이 비전투원이 된다. 그러므로 부를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가 별도의 직업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이처럼 병역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자유주의 자체가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지 않듯이, 군대 자체와 그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의 전문성을 요구할 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곧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스미스는 직업군인이 민병보다 뛰어난 것이 단지 병기의 취급에서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쟁에서 무기를 뛰어나게 다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습관”인데, 직업군인이 이 점에서 민병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sup>22)</sup> 자유주의적 시각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성을 모든 시민에게 요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신 그것을 특수한 직업 집단에게만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한 사회 전체가 전쟁과 관련한 능력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한 능력도 함께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이런 시각은 오늘날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관련되는데, 공화주의자들이 정치를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은 정치를 선출된 대표들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22) 스미스, 『국부론』, p. 865.

### 3. 시민군 이상에 대한 평화주의적 비판

국가는 과연 누가 지켜야 할까? 모든 시민이? 아니면 선별된 직업 군인이? 평화주의는 강제로라도 모든 시민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노력도, 그리고 프로페셔널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자유주의적 시도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평화주의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합리적 공포심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주의자의 생각에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두 개의 터무니없는 공포심”, 곧 “내부의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공포심” 탓이다.<sup>23)</sup>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터무니없는’ 공포심을 극복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군대 역시 필요 없어질 것이다.

평화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병역이라는 의무의 공평한 분배나 군대의 전문성, 군사적 활동이 내포하는 영웅성이나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함양되는 시민의 덕성 등에 관심이 없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성과 도덕성이다. 정치는, 그리고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연속’인 전쟁은 다만 그것을 파괴할 뿐이다. 20세기 초의 저명한 반전평화주의자 러셀(Bertrand Russel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프랑스 화가가 그림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에는 무관심하다고 하자.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독일인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어느 독일 음악가 역시 똑같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어느 날 그에게 주위 사람들이 인류의 수치라고 일컫는 반역적인 프랑스인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면 안 될까? 전쟁은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맡겨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서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면 두 사람은 동포들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런 운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러 나선다. 음악가가 죽지 않고 화가가 죽으

23)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서울: 비아북, 2010, p. 63.

면 독일이 기뻐하고, 화가가 죽지 않고 음악가가 죽으면 프랑스가 기뻐한다. 어느 누구도 화가가 죽든 음악가가 죽든 문명이 손실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sup>24)</sup>

영국인 러셀의 이런 생각을 19세기 미국의 문필가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도, 현대 한국의 평화주의적 병역거부자들도 공유한다. 평화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전쟁의 종식과 군대의 폐지이지만,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군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선택(거부)의 보장이다. 즉 군대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가게 하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기능적 분업과 유사해 보이는 이것은 말하자면 ‘신념에 따른’ 분업이다. 총을 잡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런 주장은 도덕적 상대주의 같지만, 사실 ‘단 한 명의 사람도 도덕적으로 다수일 수 있다’(a majority of one)는 소로우의 주장<sup>25)</sup>이나 ‘화가나 음악가가 구현하고 있는 문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러셀의 주장에는 도덕적 우월주의가 숨어 있다. 총을 들고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각자의 ‘신념에 따른 분업’이 현 상황에서 인류가 도덕성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화주의자들은 생각한다.

병역의 거부를 합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론한다. “그러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는가?” 평화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말이야말로 국가가 강제로 징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들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모두가 군대에 가지 않으면 국가는 누가 지키는가?” 이처럼 군대의 필요성은 외부의 적의 존재에 의해 증명되고, 징집의 필요성은 군대의 필요성에 의해 증명된다. 외부의 적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포심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24) 러셀, 위의 책, pp. 58-59.

25)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1999, p. 30.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공포심으로부터 함께 해방되지 않으면 평화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 Ⅲ. 근대 한국에서의 시민군 이상의 등장과 쇠퇴

지금까지 우리는 병역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과 그 핵심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공화주의적 시민군의 이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군사주의적·국가주의적 왜곡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쇠퇴하면서도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 1. 일제 치하 ‘상상국가’ 속에서의 시민군 이상의 등장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조선 개혁 세력의 최고 목적은 ‘근대국가 건설’이었다. 그것을 다시 두 가지 목표로 요약하면 바로 ‘부국’과 ‘강병’이었다. 일본과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청제국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구한말의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은 부유하고 강한 ‘근대적’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보기에 당시의 부유하고 강한 서구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국민개병제였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 군대가 국민군대로 변하면서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칭적으로 그에 맞설 수 있기 위해 앞다퉈 징집을 확대 실시했고,<sup>26)</sup> 그것이 유럽 바깥으로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이나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군대로 만드는 ‘강병’이 ‘부국’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876년의 강화도조약 이후로 거의 10년에 한 번씩 발생한 대형 사건들을 통해 당국자들은 조선의 군대가 새로운 세계에서 국방의 의무는 물론이고 대내적인 질서 유지의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

26)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pp. 189 이하 참조.

으며,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징병제는 “근대 담론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27)</sup>

당시 조선의 군사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1894년 여름 조선을 여행한 오스트리아인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Ernst von Hesse-Wartegg)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선 정부의 공식 목록에서 나는 조선의 독자적인 군대의 인원이 120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이나 ‘아침노을의 나라’ 어느 곳에도 조선 병사는 한 명도 없다. [...] 조선이 한 명의 병사도 내보내지 않은 가운데 일본군 여단은 조선에 상륙했다. 도대체 120만 명의 군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 조선의 ‘군제’에 따르면 사지가 건강한 모든 남자는 양반 계급에 속하지 않는 한 군인의 의무를 지며, 군인으로 등록된다. 이것이 바로 12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 군인 중 99퍼센트가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며, 군복을 입어본 일이 없다. 조선의 관리들과 장교들은 뇌물을 받기로 유명한데 [...] 이 때문에 병사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아주 수지가 좋은 장사다. 고급 관리에게 돈을 주고 하급 관리가 된 사람이 병사들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장 구역의 도시와 마을을 매년 순시할 때면, 얼마를 주면 이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 대다수의 장교들은 군제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다. 200년 동안 이 나라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야전 경험이나 전쟁 경험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8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여행하는 것 외에는 조선인이 고국을 떠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 조직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다.<sup>28)</sup>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종은 유럽에서 징병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했다. 1895년 1월 7일 발표한 「홍범 14조」의 제12조(“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에서도 드러나듯이, 고종은 징병제 지

27) 박노자, “징병제: 개화기 때 실현되지 못한 ‘근대의 꿈’.” 『인물과사상』 통권74호, 2004, p. 43.

28)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지음, 장현규 옮김, 『조선, 1894년 여름』, 서울: 책과함께, 2012, pp. 145-151.

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병사들에게는 물론이고 미국인 군사 고문에게조차 보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고종은 그런 야심찬 개혁을 실행할 수 없었다.<sup>29)</sup>

고종과 친정부 지식인들이 징병제를 다른 무엇보다도 ‘강병’의 수단으로만 인식했다면, 많은 기독교적 급진개화파들은 이미 근대 여명기인 당시에 군대를, 특히 징병제 군대를 “진취적이며 상무적이며 위생적이며 복종 잘 하는 근대 ‘국민’의 훈육 기구”로 인식했다.<sup>30)</sup> 징병제 군대가 근대적 국민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에 이미 인식되었던 것이다.

근대적 국가 만들기는 당시 개혁 세력의 최고 목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식인들은 ‘국민’ 개념을 만들어 평민을 공론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황제권이 약해지자 (유명무실한 황제 대신에) 그 ‘국민’을 국가 만들기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 호명하기 시작했다. ‘신민(臣民)’이 ‘국민’으로 명명된 것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 강점은 국민 국가로 가는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국민 호명으로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국가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소멸된 국가는 상상 속에서 재현되었고, 호명된 국민은 그 ‘상상국가’ 속으로 들어갔다.<sup>31)</sup>

이것은 해방 전에, 그리고 해방 후에도 한동안, 조선/한국의 시민사회에 중요한 한계를 부과했다. 즉 시민사회가 국가와의 대결 구도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성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저항, 협력 관계 속에서 일차적으로 유래한다.<sup>32)</sup> 그러나 조선에서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결사체들이 태어나자마자 구체제가 몰락해 버렸기 때문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근대적 독립 국가를 구체하고 건조하는 일이 갖 태어난 결사체들에게 오히려 일차적 과제로 주어졌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경험을 시민사회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근대 이행기 조선에서 태어난 개인, 결사체, 사회는

29) 박노자, “징병제”, p. 47.

30) 박노자, 위의 글, p. 50.

31)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서울: 민음사, 2013, p. 17.

32) 송호근, 위의 책, p. 18.



국가와의 대결 구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소멸하는 국가를 회복해야 하는 태생적 운명을 부여받았다.”<sup>33)</sup> 이런 경험의 한계는 해방 후에도 이어지는데, 해방 후 곧 맞이하게 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남한의 개인과 결사체, 사회가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또는 협력만 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런 한계가 군대의 역할이나 성격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해방 전의 시기로 돌아가보자. 송호근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 없는 사회에서 태어난 결사체들은 견제와 저항 대신에 ‘상상국가’, 즉 상상을 통해 선취된 근대적 독립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처음부터 떠맡게 되었다. 그런 임무를 떠맡은 결사체들이 군사적 지향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여러 군사 단체들이 실제로 독립을 위해 결성되기도 했고, 1910년 이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여러 단체들이 강령을 통해 국권의 회복 이후에 실시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서 ‘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해 임시정부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포고 제1호’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병역의무를 미리 규정했다.<sup>34)</sup> 구한말부터 나타난 ‘국민개병’을 통한 ‘강병’과 ‘국민 형성’의 지향은 국권을 상실한 동안에도 ‘상상국가’ 속에서 다양한 결사체를 통해 이어졌다.

1910년을 전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등장한 군사적 결사체인 의병(義兵)들은 북상 망명하여 만주 지역에서 서서히 독립군으로 전환해갔다. 그리하여 홍범도, 박장호, 이진룡, 김정규, 전덕원, 백삼규 등의 의병장들이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군 단체의 지도자로 등장했다.<sup>35)</sup> 이 시기에 등장한 많은 무장 독립단체들이 군사적 덕성을 ‘국민’의 중요한 자질로 간주하고 훈육한 것을 박노자를 비롯한 많은 평화주의 지향의 학자들은 비판한다. 이들이 문제시하는 여러 군사적 덕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조건적 복종’이다. 이것이 이른바 근

33) 송호근, 위의 책, pp. 18-19.

34) 『독립신문』 1921년 3월 21일자 2면; 박노자, “징병제”, p. 54 참조.

35)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 531.

대적 시민이 갖춰야 할 덕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 병사들에게 훈련된 복종이 구체제에서의 복종이나 일제 치하에서 강요된 복종과 과연 같은 것이었을까? 당시에 각종 군사단체에서 조선인이 요구받고 훈련받은 복종은 예속과도 같은 전근대적 복종이나 일제치하에서의 복종과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행여 그 훈련 과정에서 강제가 있었다라도, 그 복종은 자신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예속과 달랐으며, 그런 점에서 또한 근대적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국권을 상실한 초기에는 그 군사단체들이 임박한 ‘독립전쟁’을 위해 군인을 양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상국가’ 속에서는 한계는 있었지만, 근대적 시민을 길러내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했다. 이때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것, 즉 군인이 되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복무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sup>36)</sup> 이런 점에서 일제 시대의 해외 무장단체들은 마키아벨리나 스피노자, 루소가 옹호한 것과 같은 공화주의적 시민군이었고, 그런 것으로서 해방 후 한국 군대와 시민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일종의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a)’의 역할을 해왔다.

## 2. 두 번의 전쟁과 징집, 그리고 시민군 이상의 쇠퇴

대한제국 시기부터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로부터의 논의였다. 국권을 찬탈 당했을 때, 아래로부터 폭넓게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그런 자발적 결사체 속에서 시민은 태어났고, 그런 시민들이 ‘상상국가’를 지키기 위해 다시 군사적 성격의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전체 조선인의 수에 비하면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sup>37)</sup> 대다수 조선인들이 식민지

36) 스피노자의 표현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 외에 다른 대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정치론』, pp. 213-215.

조선에서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일본은 넓어진 전장에 병력을 공급하기 위해 징병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이때 징병의 대상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전세(戰勢)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본 제국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급기야 징병제를 실시했다. “일제 말기인 194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징병제는 채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39만 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전장으로 끌고 갔다.”<sup>38)</sup> 조선의 민중이 최초로 경험한 징병제는 외세에 의해 지극히 타율적으로 강제된 것이었으며, 거의 죽을 것이 확실시되는 전쟁에 불행하게 동원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인/한국인에게는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남게 되었다.

해방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제30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8월 6일 처음으로 「병역법」(법률 제41호)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服)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병역법에 의거하여 이듬해인 1950년 1월 첫 번째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징집은 중단되었다. 심지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마저 해체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승만 정권이 필요 이상의 병력을 소유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벌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한국군 정원을 10만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같은 해 6월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아무런

37) 시민사회의 성립과 관련해 1894년(갑오년)부터 자발적 결사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 송호근은 그것이 ‘국가 만들기’ 내지 ‘소멸되는 국가 구제하기’의 임무를 띠고 탄생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발적 결사체 가운데 상당수가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한말에 등장한 수많은 의병대와 그로부터 이어져 만주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군사조직들’이아말로 시민사회의 모체가 되는 자발적 결사체였다.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pp. 530 이하 참조) 그리고 이런 군사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국가 없는 시기에 근대국가가 아직 세워지기도 전에 먼저 국민을 호명하여 훈육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38)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자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서울: 그린비, 2011, p. 94.

준비 없이 다시 징집이 시작되었다.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징집이 실시되었는데, 미성년자이더라도 그저 총이 끌리지 않을 정도만 컸으면 징집 대상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강제 징집은 모두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 철저히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징병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징집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남겼다. 사회학자 문승숙은 한국인에게 대중 군사 동원이 사회 정치적 세력화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구의] 혁명 투쟁이나 독립 전쟁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시기 동안 평범한 남자들이 군인이 됨으로써 시민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병역의 긍정적인 유산이 있으면 군 복무가 단지 피지배자에게 강요되는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라고 보는 시민 공화주의에 기초한 관점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조선인들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안팎에서 무장 독립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남녀 대중을 동원한 독립 전쟁을 통해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항복하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남으로써 생긴 부산물처럼 해방이 주어졌다. 한국의 제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6.25전쟁 동안의 대중 군사 동원에 대한 대가로서 전후에 후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제대 군인과 가족들이 받은 대우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중 군사 동원이 사회 경제적 권리를 얻는 길이 되는 역사적 경험이 없다는 것은 군 복무를 단지 위험하고 강제적인 부담,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대중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sup>40)</sup>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게 된 전쟁과 징집이 국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병역관이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39) 임재성, 위의 책, p. 96.

40) 문승숙 지음,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서울: 포하나의문화, 2007, p. 77.

### 3. 군대를 통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

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두 개의 대립하는 국민과 국가가 형성되었다. 군대는 이 국가의 성인 남성을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학습의 장이었다.<sup>41)</sup> 새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국민학교’를 통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수 있었다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채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사후적으로나마 군대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고 국민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군대는 기술적 군사 학교와 전문적 군사 학교의 기능 외에 국민 대중을 교육시키는 “국민의 학교(school of the nation)”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42)</sup> 근대화 초기에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된 제도와 기관인 군대가 사회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떠맡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기능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국민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도 먼저 모든 국민이 그 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1960년에 입영대상자 중 병역기피자 비율은 무려 35%였다고 한다. 사회학자 임재성은 당시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실제보다 낮게 추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영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징집을 기피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sup>43)</sup> 박정희 군사정권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61년 6월 9일 내각공고 1호를

41) 모든 국민에게 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소집과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민병 방식이나 군사적 훈육이 없는 국민봉사(National Service)와 다르게, 전국에서 온 청년들을 한데 모아놓고 훈련하는 보편적 군사훈련(Universal Military Training)은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도 국민통합을 목표로 징병제를 실시했고,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도 보편적 군사훈련 옹호자들이 늘어난 이민자 집단을 이를 통해 하나의 미국인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에 관해서는 Eliot A. Cohen, *Citizens and Soldiers: The Dilemmas of Military Service*,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128 이하 참조.

42) Jong-Chun Baek, “Military Education System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rmy.” *Korea Observer* 16(4), 1985, pp. 401-402.

43)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p. 102.

통해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 신고 기간을 설정했는데, 10일 동안 무려 24만 명이 자진신고를 했다.<sup>44)</sup> 당시 병역에 대한 기피가 얼마나 심했는지, 국민들이 병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선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기의 부정적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병역에 대한 기피는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비롯했다. 국민개병제는 병역의 의무를 모든 (남성)국민에게 부과하지만, 그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실질적인 차이와 불평등이 국민개병제의 유지를 위해 간과되었다.<sup>45)</sup>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기에는 국민의 정신적 준비나 동원의 기술적 능력이 모두 부족했고,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할 경제적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남성)국민들은 군대에서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함으로써 점차 하나의 국민이, 그리고 근대적 시민이 되어갔다. 물론 그 과정은 개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국민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고, 또한 전근대적 인간이 근대적 인간으로 바뀌어갈 때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었다. 특히 그것이 전쟁에 대비하는 기관인 군대에서 이루어질 때 더 집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경험을 몇 십 년 전 일본인들도 강제적으로 해야 했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골의 농부가 시계에 맞춰 생활해야 했고, 평상시의 걸음 걸이를 버리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넓이와 속도로 걸어야 했으며, 익숙한 방언 대신 근대식의 표준어를 사용해야 했고, 양복(洋服) 형태의 군복과 발에 맞지 않는 딱딱한 군화를 신어야 했으며,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다른 것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다.<sup>46)</sup> 군대와 사회의 간격이 클수록 군대 안에서 병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사회는

44) 임재성, 위의 책, p. 103.

45)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군대』, p. 74.

46)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의 군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서울: 논형, 2005, pp. 34 이하.

군대화하였고 점차 근대화하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는, 선진국에서 “사회질서의 형태가 군대의 형태를 규정”한 것과 다르게, 일본의 근대화가 후발형 근대화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군대 자체가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을 위한 추진력이 되거나 군대의 형태가 거꾸로 사회의 형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47)</sup> 한국의 근대화 역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의 초기 발전과정에서는 군이 가장 근대화한 부문이었으며, 현대의 각종 유무형 기술들이 군을 통해 서구 선진 사회로부터 수입되어 사회에 보급되었기 때문이다.<sup>48)</sup>

요시다의 일본의 군대를 예로 들어 군대와 사회의 격차가 큰 경우 사회와는 다른 군대의 질서가 사회의 근대화를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병역의 의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모든 남성에게 ‘징병검사’라는 통과의례를 제공하며, 병사들은 군대에서 그 전에 (아직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평등주의적 요소를 일본의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준데모크라시적인 것’이라고 일컬었다.<sup>49)</sup> 이 평등성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평등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억압함으로써 사람들을 획일화한다.<sup>50)</sup> 그러므로 사회에 아직 개인의식과 그로 인한 다양성이 충분히 성장해 있지 않을 때에는 평등주의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평등한 조건 속에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군대가 오히려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의 억압적인 군대를 현대 한국 사회의 원형으로 간주

47) 요시다, 위의 책, p. 29.

48) 그러나 사회학자 홍두승은 이런 평가가 1960년대까지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민간 부문이 군보다 앞서나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6, p. 45). 군대와 사회의 관계가 역전될 때, 사회의 근대화와 관련한 군대의 순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로서의 군대의 정당성이 약해지는 것이다.

49) 요시다, 『일본의 군대』, p. 79.

50) 요시다, 위의 책, p. 83.

하고, 그런 군사주의적 모델을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한국 사회에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군대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한국 사회 전체를 군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역의 의무가 신성시되었으며, 병역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학자 권혁범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성을 무엇보다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적인 생각조차 한국 사회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개탄한다.<sup>52)</sup>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와 군대가 마치 사회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착오에서 비롯한다. 홍두승은 이런 오해가 군사문화가 하나의 하위문화로 취급되지 않고 지배적인 문화로 간주되는 데에서 비롯하며, 그 이유가 “그간 국가의 최고통수권자가 군을 배후세력으로 하여 집권하게 된 군장성 출신이었고 군조직 내에서 형성된 이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등이 때로는 민간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sup>53)</sup> 그에 의하면, 군사문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양 극단으로 갈라져 이루어져왔는데, 한편에서는 군출신 연구자들이 그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인 연구자들이 그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군대가 사회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사회가 군대에 끼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sup>54)</sup> 홍두승의 주장을 권혁범이 그 결핍을 지적한 ‘자유주의적 생각’과 관련해 다시 표현하면, 한국 사회 일반에 자유주의적 생각이 부족해서 군대 역시 자유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이지, 군대가 자유주의적이지 않아서 한국 사회가 자유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sup>55)</sup>

51)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서울: 삼인, 2004, pp. 62-63.

52) 권혁범, 위의 책, p. 68.

53)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p. 46.

54) 홍두승, 위의 책, p. 47.

55)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먼저 근대화한 조직인 한국의 군대가 서구의 근대적 기술과 지식의 수입·보급으로서 사회 전반의 근대화를 견인했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자유주의적 발전을 위한 임무마저 군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1970년대를 지나며 군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이후 사회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군대 역시 거의 불가역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 IV. 현대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군 이상의 부활과 진화

##### 1. 공화주의적 시민의 등장과 민주화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 역사를 연구한 임재성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인용하며, 감옥에 가고 분신까지 하면서 군부독재에 맞섰던 치열한 19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6)</sup> 정말 한국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그토록 강했을까?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위력을 떨칠 정도로 강력한, 그래서 정권에 맞선 운동권 학생들조차 거부할 수 없었던 군사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을까?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이른바 군사주의적·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정말 강했다면 병역 기피가 그토록 많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병역 기피 의지와 병역의 의무를 물리적으로 강제해야만 하는 현실 자체가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의 허약함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닐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조롱과 자조, 예컨대 현역복무자를 ‘어둠의 자식’으로, 18개월 방위병을 ‘사람의 아들’ 또는 ‘바퀴벌레’로 부르고, 그 반대로 6개월 방위병을 ‘장군의 아들’로, 면제자를 ‘신의 아들’로 부른 일은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병역이 해방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여겨졌고 징집도 이른바 ‘돈 있고 뺨 있는’ 집 자식들은 빠져나가는 불공평한 법집행으로 여겨지는 사이에, 1980년대의 ‘전투적’ 학생 운동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공화주의적 시민군 이상을 부활시켰다.

56)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p. 112.

공화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이다. 공화국의 시민들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군주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의 전투적 학생운동은 맹목적으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투항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의 쓸모를 인정하면서 다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단순히 사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 또는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들과 다르게, 군대 자체를 긍정하면서 다만 병역의 의무가 정말 국가와 국민/민족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군인을 보면서 '진짜 군인', '진짜 군대'라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물음으로써 현실 비판을 위한 규제적 이념으로서의 시민군 이상을 부활시켰고, 스스로 무장함으로써 그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국민개병제가 군대의 '시민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광주의 시민들은 스스로 군인이 됨으로써 '진짜 시민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가짜 시민군'과 '진짜 시민군' 간의 대결이 벌어졌다.<sup>57)</sup> 그리고 이 대결은 1980년대 내내 계속됐다.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5.18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진짜 시민군'의 전통을 이으며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던 것이다.

이 공화주의적 시민들은 어디에서 길러졌을까? 이들은 학교에서, 서클에서, 교회에서, 그러나 또한 군대에서 때로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긍정적 교육을 통해, 때로는 사익이 지배하는 불의를 경험하는 부정적 교육을 통해 길러졌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과 군대의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것을 진정으로 공익에 부합하게 만들려고 했다.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군대의 민주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군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억누르기 위해 정권은 시민사회를 더욱 억압했다. 이런 억압 속에

57) '가짜 시민군'과 '진짜 시민군'이라는 표현은 강인철, 『5.18 광주 커뮤니티스: 항쟁, 공동체 그리고 사회드라마』, 서울: 사람의무늬, 2020, p. 196.

서 입대를 거부하며, 군대 내에서 부조리한 일들을 폭로하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심지어 군사적 형태로 독재에 맞서 싸우며 시민들은 병역과 군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1980년대를 지나며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타인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것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가 나누어졌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계급과 계층이 분화했고, 계급 지배의 현실도 깨닫게 되었으며, 때로는 그런 지배의 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모험적 시도도 나타났지만, 점차 계급간의 비지배적 공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장한 결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마침내 군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공화주의적 열정은 1990년대 후반에 닥친 경제적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흐름 속에서 다시 사라졌다. 공익을 추구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어느새 일터로 돌아가 그저 경제적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각자도생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 2. 경제 위기와 탈영웅적 시민의 등장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에서 많은 남자들이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남녀평등을 향해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여기며 기뻐했다. 이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되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1980년대의 경제적 호황 속에서

늘어난 대학 정원은 오히려 대규모 대졸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취직을 위한 대졸자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사정이 어려울 때 직원들에게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기업의 현실을 지켜본 취업준비생들은 신분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점점 더 바라게 되었다.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7급 및 9급 공무원 선발 시험과 공기업 사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sup>58)</sup>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높아진 결과, 여성은 여전한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이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것을 남자들은 경쟁이 격심해지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과 병행하여 사회의 자유화와 평등화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이 정권에서 여성부가 신설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등장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던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군복무 경력은 이제 순전한 시간 낭비로 여겨졌다.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됐다. 한편에서 사람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은, 특히 그런 노력에 실패해서 병역을 불가피하게 마친 경우, 그 의무를 어떤 이유에서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며 공격했다. 그런 비난과 공격은 여성을 향하기도 했고, 연예인을 향하기도 했으며, 스포츠 스타를 향하기도 했고, 특권층 자녀들을 향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향하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 이런 분노와 공격은 매우 정당하고 평등주의와 민주적 심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

58) 엄밀히 얘기하면 군복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남자들의 군복무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무원 채용시에 당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이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1969년 이래 유지되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남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적 박탈감에 근거한 것이었다.<sup>59)</sup> 공공선의 달성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시민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상인의 손실만회 심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체념적 태도와 비하적 인식이 사회에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군복무를 가능한 한 피하려는 노력은 모병제 담론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모병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전에도 군의 현대화와 관련해 논의되었지만,<sup>60)</sup> 이것이 대중적 수준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개인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며,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사회양극화에도 관련된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물론이고 병역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의무마저,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그렇게 여겨지듯이, 일정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사회 하층민에게 전가되어야 할 일종의 ‘더러운 작업(dirty work)’ 정도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sup>61)</sup> 또 다른 형태의 병역 기피 노력은 이민과 원정 출산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됨을 기피하는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많은 중산층 가정의 해외로 이민을 떠났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미성년 자식에게서 병역의 의무를 당당히 벗겨줄 수 있었다.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 같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식을 출산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과 함께 병역 면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했다.

한때 묵묵히 자신을 희생해가며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던 남성들은 사라지고 이제 가능하면 병역을 기피하고, 안 되면 편한 곳이라도 배치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적 손해를 국가가 어떻게든 보상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약한’ 남자

59) 독일의 행동경제학 연구집단 브리크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도 한국인의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https://www.briq-institute.org/global-preferences/rankings> 참조.

60) 대표적으로 신정현 엮음,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서울: 나남, 1996.

61) ‘더러운 작업’과 같은 부정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마이클 왈처 지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pp. 283 이하 참조.

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영웅적(heroic)’ 시민이 아니라, 단지 손익을 따지며 자기 이익을 위해 최대한 위험을 기피하는 ‘탈영웅적(post-heroic)’ 시민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촛불집회는 이런 탈영웅적 시민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었다.

### 3. 촛불시위와 새로운 참여적 시민의 등장

21세기의 촛불집회는 과거의 시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그 참여 주체가 다양해졌다.<sup>62)</sup> 2002년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는 어린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2016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중심 없이’ 중심이 되었다. 과거의 시위가 남성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21세기의 촛불시위는 어느 특정 세대가 주도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21세기의 촛불집회는 뚜렷한 비폭력적 성향을 보였다.<sup>63)</sup> 한편으로 그것은 위험을 기피하는 ‘경제적 인간’의 탈영웅적 성향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성숙해진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21세기의 촛불집회는 그것이 제기한 각종 의제들을 통해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공공성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여주었다.<sup>64)</sup>

시위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비폭력성, 그리고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공성의 추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민군’의 이상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다양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 이

62) 신진옥,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기억과 전망』 19호, 2008, p. 114.

63) 이관후,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시민사회와 NGO』 제15권 1호, 2017, p. 41.

64) 신진옥,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pp. 117-118; 김종법,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동북아연구』 제34권 1호, 2019, pp. 266-267.

익을 위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약 100년 전 상상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한 것과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정신은 동일하다. 시민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희생적이고 영웅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희생적이고 영웅적이다. 시간을 할애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공부하며, 일상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광장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동료 시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영웅적 침착함(heroic calmness)’을 보여준다.<sup>65)</sup>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희생정신과 영웅성은 시민군의 이상이 21세기에든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 예컨대 모든 남녀 시민의 보편적 사회복무제와 그 하위 형태인 선택적 군복무제 형태로 – 보존되고 실현될 수 있음을 또한 알려준다.

민주공화국은 공통의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국민을 요구하며, 동료 시민을 평등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시민을 요구하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춘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병역 제도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존속에 필수적인 정치문화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또한 가진다.<sup>66)</sup> 그러므로 모든 시민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민군의 이상은, 21세기에든 민주공화국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폐기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의무를 기꺼이 함께 짊어지려고 한 시민들이 보여주는 것은 ‘시민=군인’의 이상이 오늘날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의미를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5) ‘영웅적 침착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서구 세계에서 벌어진 여러 테러 사건 속에서 불안에 떨며 숨지 않고 ‘침착하게’ 일상을 지속하는 시민들의 과거와는 다른 의미의,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스트의 영웅성과도 다른 의미의 ‘영웅성’을 가리키기 위해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Herfried Münkler)가 사용한 표현이다.

66) 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병역제도와 의무복무제의 폐지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Ines-Jacqueline Werkner, “Wehrpflicht und Zivildienst: Bestandteile der politischen Kultu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8, 2011; Herfried Münkler, “Nach der Wehrpflicht. Das Verschwinden der Masseheere und die Folgen für die Zivilgesellschaft.” *Der Wandel des Krieges: Von der Symmetrie zur Asymmetrie*. Weilerswist: Velbrück Wissenschaft, 2006 참조.

##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자유주의와 평화주의의 비판 속에서도 이어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시민군의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 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다시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쇠퇴했는지 살펴보았다.

모든 시민을 군인으로 만들려는 공화주의적 기획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 수준이 높지 않던 때의 낭만적 이상처럼 보일 수 있고, 평화주의적 시각에서는 그저 군사주의의 다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군인’의 이상은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또는 경제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정치공동체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의 연합과 다르고, 효율적 분업 체계를 갖춘 공장과도 다르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도덕주의자나 종교 신자들의 모임과도 다른 것 같이, 군인이 되는 것도 그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하는 것과 다르고,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투입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그렇게 변하고 군인됨이 그렇게 오해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 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면 말이다.



## 참고문헌

- 강인철, 『5.18 광주 커뮤니티스: 항쟁, 공동체 그리고 사회드라마』, 서울: 사람의무늬, 2020.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서울: 삼인, 2004.
- 김경희,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2009.
- 김종범,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동북아연구』 제34권 1호, 2019.
- 러셀, 버트런드 지음, 이순희 옮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서울: 비아북, 2010.
- 루소, 장 자크 지음, 김중현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팽귤클래식, 2010.
- 마키아벨리, 니콜로 지음,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2003.
- 마키아벨리, 니콜로 지음,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15.
- 문승숙 지음, 이희숙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서울: 포하나의문화, 2007.
- 박노자, “징병제: 개화기 때 실현되지 못한 ‘근대의 꿈.’” 『인물과 사상』 6월호(통권 74호), 2004.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서울: 민음사, 2013.
- 서병훈,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 비판적 성찰.” 『서양 고대·중세 정치사상사』, 서울: 책 세상, 2011.
- 슈나이더, 볼프 지음, 박종대 옮김, 『군인』, 서울: 열린책들, 2015.
- 스미스, 아담 지음, 김수행 옮김, 『국부론』(하), 서울: 비봉출판사, 2007.
-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데 지음, 공진성 옮김, 『정치론』, 서울: 길, 2020.
- 신진옥,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기억과 전망』 19호, 2008.
- 왈저, 마이클 지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의 근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서울: 논형, 2015.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 이관후,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5권 1호, 2017.
- 이상규,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 『역사신학 논총』 제11권, 2006.
-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서울: 그린비, 2011.
- 헤세-바르텍, 에른스트 폰 지음, 정현규 옮김, 『조선, 1894년 여름』, 서울: 책과함께, 2012.
- 홍두승, 『한국 근대의 사회학』(증보판), 서울: 나남, 1996.
- Baek, Jong-Chun, “Military Education System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rmy.” *Korea Observer* 16(4), 1985.

Cohen, Eliot A., *Citizens and Soldiers: The Dilemmas of Military Service*.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Münkler, Herfried, “Nach der Wehrpflicht. Das Verschwinden der Massenheere und die Folgen für die Zivilgesellschaft.” *Der Wandel des Krieges: Von der Symmetrie zur Asymmetrie*. Weilerswist: Velbrück Wissenschaft, 2006.

Werkner, Ines-Jacqueline, “Wehrpflicht und Zivildienst: Bestandteile der politischen Kultu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8, 2011.

<https://www.briq-institute.org/global-preferences/rankings>

Abstract

Making Citizen-Soldier in Korea:  
A Failed Project or The Unfinished Project?

Jin Sung Gong (Associate Professor, Chosu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republican ideal of turning citizens who are members of a political community into soldiers who are willing to take up arms in their own hands to defend their own political community, was emerged in the crisis of loosing sovereignty at the end of Korean Empire, maintained by citizens in the 'imagined state'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distorted by forced conscription during two wars and military dictatorships, and declined so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t reformation of the society after being reappeared with the passionat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is evolving with the emergence of participative citizens observed during the candlelight vigils of 21st century. The ideal of citizen-soldiers will continue to have a very important political meaning as a regulative idea needed to criticize and correct reality, as long as we still believe that a political community should belong to all citizens, and that such a democratic republic should be defended.

Keywords: Citizen-Soldier, Republicanism, Liberalism, Pacificism, Military Service

투고일: 2020년 6월 30일, 심사일: 2020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0일